

도, 하반기 새만금·해양수산사업 ‘총력’

전북을 해양수산 거점으로

‘글로벌 메가샌드박스’ 등 새만금 핵심과제 국정과제화 대응
신항만 개항 준비·어촌 활성화 등 해양수산 미래 기반 구축

전북특별자치도가 올해 상반기 새만금과 해양수산 분야에서 거둔 성과를 바탕으로, 하반기에는 보다 가시적인 성과 창출에 행정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도는 새만금 개발 가속화와 수산업 경쟁력 강화, 해양환경 개선을 통해 전북을 해양수산 거점 지역으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이다.

도 새만금해양수산국 김미정 국장은 17일 오전 도청 기자회견에서 브리핑을 통해 전북도에서는 상반기 성과를 바탕으로 하반기에는 새만금 해양수산사업에 총력을 경주하겠다고 밝혔다.

도는 상반기 동안 새만금 핵심과제를 국정과제로 반영하기 위해 전문가가 위임그룹을 운영하고, 제2국가산단 조성, 광역 기반시설 선투자, 공공주도 매립 등 핵심 전략이 담긴 ‘새만금 메가비전’과 실행계획을 수립해 국정기획위원회 및 관계부처에 적극 건의했다. 이를 통해 새만금 사업 일괄 예타 면제, 네거티브 규제 도입, 외국인 고용특례 확대, 인센티브 강화 등 구체적 성과를 도출

하고 있다.

내부적으로는 산업용지 3·7공구 매립과 스마트 수변도시 통합개발계획 변경 등을 통해 본격적인 내부개발에 나섰으며, 새만금 수질 개선을 위해 해수 유통 확대 방안을 기본계획에 반영했다. 익산시에서 추진 중인 우분연료화 사업은 459억원 규모로 타당성 검토를 통과하며 법령 개정과 본격 사업 추진의 발판도 마련했다.

수산 분야에서는 김 육상양식 R&D 국비 공모에 선정되어 350억원 규모의 연구개발과 특허출원이 진행 중이다. 도는 AI 기반 양식기술을 포함한 7개 신규 과제를 발굴해 국책사업 반영을 추진하고 있으며,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민관 협업체 운영을 통해 전북형 양식산업 기반을 강화하고 있다.

항만 분야에서는 새만금 신항의 2026년 개항을 목표로 접안시설과 항로·박지 준설공사를 차질 없이 추진 중이다. 해양수산부 중앙항만정책심의회를 통해 새만금항과 군산항을 통합한 ‘새만금항’ 명칭이 확

정됐으며, 크루즈 TF 운영과 관련 연구용역 착수로 관광 및 물류 기능 강화도 진행되고 있다.

청정 해양환경 조성과 해양레저 기반 구축에도 성과가 있었다. 민간 합동 해양정화 활동을 통해 76톤의 해양폐기물을 수거하고 약 3억 8천만 원의 예산 절감 효과를 거뒀다. 광역 해양레저체험 복합단지 조성을 비롯해 부안 격포항 해양레저 중심지 육성(300억원), 고창 두어마을 갯벌생태마을 지정(최대 9억7,000만원) 등 지역 특화형 사업도 활발히 추진됐다. 아울러 청년 어업인 어촌 정착금 지원 확대 등 어촌의 지속가능발전 기반 마련에도 힘썼다.

하반기에는 새만금 기본계획의 신속한 재수립과 제2 산단 개발 가속화를 통해 산업용지 공급 확대에 나선다. 스마트 수변도시 내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용지 분야에 추진되며, 새만금호의 수질 개선을 위한 해수유입 확대와 배수갑문 추가 설치 방안도 적극 검토될 예정이다.

수산 분야에서는 품종 다변화, 어

장 복원, 양식 기술 혁신 등 단기 및 중장기 과제를 병행하며 미래 양식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계획이다. 친환경 부표 보급사업의 자부담을 낮춰 수용성을 높이고, 국비 확대를 통해 보급률을 높이기도 했다. 김 육상양식 분야에서는 종자연구, 표준양식 모델 개발, 교육시설 조성, AI Farm 기술 개발 등이 본격화된다.

항만 개발 역시 박차를 가한다. 새만금 신항 접안시설 조기 완공과 북측 진입도로, 방파제 예산 확보를 추진하고, 민자 개발로 계획된 배후 부지의 재정 전환을 위해 중앙정부와 정치권을 상대로 전략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또한, 김제 심포항 국립해양생명과학관 유치와 군산 말도 등대 해양 문화공간 조성 등 해양 문화시설 유치에도 총력을 기울인다.

김미정 전북자치도 새만금해양수산국장은 “상반기 성과를 기반으로 하반기에는 새만금과 해양수산 분야 핵심 과제들이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며 “속도감 있는 개발과 지속 가능한 수산업, 깨끗한 해양환경 조성을 통해 전북이 해양수산과 항만 경제의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재배면적 줄어도 농가소득 줄어선 안돼”

민주 윤준병 의원, 농작물 재배 조정 시 소득 보전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이 17일, 벼 등 농작물의 재배면적 조정 의무가 부과될 경우 이에 따른 소득 감소를 보전하는 내용의 ‘농작물 재배조정 경제적 인센티브 지급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정부가 수급 조절을 위해 농가에 재배면적 조정 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에 따른 손실 보상이나 지원 기준은 미비한 상태다.

윤 의원은 이로 인해 농가가 타작물로 전환하면서 발생하는 소득 감소나 피해에 대한 법적 보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법안은 재배면적을 줄이거나 조정할 경우 그 비율에 따라 경제적 인센티브나 보조금을 지급하고, 그 지원 수준은 조정 이전에 기대되는 소득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명시했다. 또 조정 의무 부과는 관련 수급 계획에 따라 투명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윤 의원은 “정부가 일반적으로 벼 재배면적 감축 목표를 정하고 이를 지자체와 농가에 강제하면서 패널티까지 예고한 것은 문제가 있다”며 “조정 의무를 부과할 경우 명확한 보상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법안을 통해 농민의 소득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정부 책임 농정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 정음=김대환 기자

기관·법인·단체도 전북인대상 받나?

염영선 도의원, 자랑스러운 전북인대상 개정 조례안 발의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염영선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읍2)이 17일 ‘자랑스러운 전북인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전북특별자치도민의 폭넓은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법인·단체에 대해 ‘특별공로상’을 수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과 별표, 별지 등을 신설 및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만호 기자



염영선 의원은 “그동안 기관, 법인, 단체 등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랑스러운 전북인대상을 수여할 제도적 근거가 미비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이들의 공로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물론, 지속 가능한 협력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자랑스러운 전북인대상의 상징성과 공신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며, 나아가 전북특별자치도의 대외 이미지 제고와 지역 브랜드 가치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만호 기자

도의회 상임위, 2025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

기획행정위·교육위·경산건위·문안위·농복합위 등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제420회 임시회를 맞아 각 상임위원회별로 2025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며 도청 점검에 속도를 내고 있다.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최형열)는 17일 자치행정국, 대변인실, 감사위원회, 대외국제소통국, 국제협력진흥원, 자원봉사센터 등 6개 부서로부터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받았다.

위원들은 상반기 성과를 면밀히 검토하며 보완점과 개선사항에 대해 집중 질의했고, 보다 체계적이고 책임 있는 행정을 주문했다. 교육위원회(위원장 진형석)는 지난 16일부터 유정기 부교육감(현 교육감 권한대행)을 상대로 정책질의를 시작으로 업무보고를 진행 중이다.

위원회는 최근 논란이 된 ‘자몽’ 관련 단체의 사실 왜곡과 여론 호도, 의정활동 방해 행위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향후 교육정책 추진 시 철저한 준비와 지자체와의 협력을 강조했다.

경제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대중)는 17일 도 미래첨단산업국을 상대로 하반기 업무보고를 청취했다. 위원들은 미래산업 육성을 위한 정

책 방향과 핵심과제에 대해 질의하며 실질적인 성과 창출을 위한 실행계획 마련을 촉구했다. 같은 날 열린 문화안전소방위원회(위원장 박정규)는 문화체육관광국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위원회는 세계사예전북비엔날레관의 주차 및 진출입로 문제 해결을 요구했으며, 전북 관광 발전을 위한 치유음식과 지역 특색 콘텐츠 발굴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농업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임승식)는 복지여성보건의료국, 사회서비스원, 전북여성가족재단의 업무보고를 청취하며 유보통합, 공공돌봄, 노인일자리, 다문화가정, 청년 고립 문제 등 복지현안을 집중 점검했다.

위원들은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도의회는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쉬는 시간도 아끼며 각 상임위별로 치열한 점검과 질의를 이어가고 있다.

도민의 삶과 직결된 현안들을 꼼꼼히 짚으며 도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평가다. /이만호 기자

전북소방, 풍수해 대응 2단계 긴급대응체계 돌입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본부장 이오숙)는 17일 오후 1시 30분을 기해 풍수해 대응 2단계 긴급대응체계를 발령하고 최대 수위의 소방력을 동원하여 대응에 나섰다.

이날 오후 1시 30분, 정읍시와 임실군에 발효 중이던 호우주의보가 호우경보로 격상됐으며, 현재 도내 총 4개 시군(정읍, 남원, 임실, 순창)에 호우경보가 발효 중이다. 정읍, 남원, 임실, 순창을 제외한 전북 전 지역에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상태다.

이에 전북소방은 산사태·급류·저지대 침수 등 2차 피해 우려가 커짐에 따라 전제적 상황판단회의를 실시하는 한편, 즉시 대응단계를 격상하고,

1,019명의 소방인력을 가용태세로 전환했다.

전 소방서는 급경사지·하천변을 중심으로 침수 위험이 높은 지역을 우선 예찰구역으로 설정하고, 저지대 지하차도 및 농경지 일대에 대한 순찰을 강화했다. 출동 인력은 2인 1조로 편성해 현장 안전을 확보하고, 비상상황 발생 시 도민의 신고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지역별 상황관리체계를 집중 운영하고 있다.

소방본부는 기상특보 발효 단계부터 모든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며, 관계기관과의 협조 하에 사전 점검과 예방 활동을 병행한다. /이만호 기자

전북자치도, 저출생 대응

기업 릴레이 캠페인 이어가

전북특별자치도가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기업 릴레이 캠페인을 이어가고 있다.

도는 17일 고창군 부안면에 위치한 수산물 가공 전문기업 ‘참바다영어로조합법인’을 방문해, ‘저출생 공동대응 릴레이 캠페인’ 두 번째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조운정 전북도 인구청년정책과장, 김종화 대표이사, 사내 부부 직원 등이 참석해 가족친화적 직장문화 실천 사례를 공유하고, 저출생 대응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1997년 설립된 참바다는 남성 육아휴직, 배우자 출산휴가, 가족친화 직장교육 등 다양한 가족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해 온 기업으로, 고창 지역 고용률 70% 이상을 유지하는 고용친화 기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를 포함한 포용적 조직문화 실현이 눈에 띈다. /이만호 기자

도, 전북 농생명위원회

혁신기획단 제2차 회의

전북특별자치도는 도내 농식품기업이 겪고 있는 기술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협의 자리를 마련했다.

도는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에서 ‘농생명혁신성장위원회 혁신기획단’ 제2차 회의를 개최하고, 전문경력 활동가와와의 연계를 통한 기업 기술 컨설팅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는 전북특별자치도를 비롯해 농생명 산업과 관련한 기술을 보유한 도내 주요 기관 6곳이 참석했다. 참석 기관은 △전북자치도 △도 농업기술원 △한국식품연구원 △한국농업기술진흥원 △전북테크노파크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등으로, 농생명 분야의 연구개발 및 기술지원을 담당하는 핵심 기관들이다.

또한 농생명혁신성장위원회 내 5개 분과의 위원장과 전문경력을 보유한 활동가 등 약 30명이 함께 자리했다. 이들은 회의에서 과제 발굴 현황을 점검하고, 애로기술에 대한 수요조사 결과와 기업 맞춤형 컨설팅 추진 상황을 공유하며 향후 실질적인 현장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만호 기자



계엄 해제 상징식 제막식

제헌절인 17일, 국회의사당에서 경축식과 ‘계엄 해제 상징식’ 제막식이 열린 가운데, 국회의원 등 참석자들이 계엄 해제 상징식 제막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의 원동력이 될 것”

민주 이춘석 의원, 제헌절 경축식·계엄 해제 상징식 제막식 참석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익산갑·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은 17일 제헌절을 맞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경축식과 ‘계엄 해제 상징식’ 제막식에 참석했다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밝혔다.

이날 행사는 장맛비가 내리는 날씨 속에서도 진행됐으며, 비옷을 입은 20여 명의 국회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의 헌법적 책무를 되새기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이 의원은 “상징식에 새겨진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 대한민국 국회’라는 문구를 바라보며, 계엄령 철폐를 외치며 거리에서 함께했던 시민들의 얼굴이 떠올랐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겨울, 계엄 해제는 국회만의 결정이 아닌, 거리에서 용기 있게 맞섰던 시민들의 희생 덕분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열다섯 글자 속에 다 담지

못한 위대한 시민들의 헌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며 “국회가 민주주의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에 머무르지 않고,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제막된 계엄 해제 상징식은 헌법 가치 수호와 시민의 저항 정신을 기리기 위해 국회 본청 앞에 세워졌으며, 제헌절의 의미를 다시금 되새기는 계기가 됐다. /이만호 기자

‘익산형 돛구장’ 구상안 공식 제안

최병관 전 행정부지사

전북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를 역임한 최병관 전 부지사가 17일 ‘익산형 돛구장’ 구상안을 공식 제안하며 지역 도시전략 논의에 불을 지폈다.

최 전 부지사는 “돛은 단순한 체육시설이 아니라 도시 콘텐츠 인프라”라고 강조했다.

최 전 부지사에 따르면, 익산형 돛구장은 단순한 스포츠 시설을 넘어, 교통·관광·문화 기능을 갖춘 복합레



지·보석박물관 등 관광자원 연계 등이 핵심 전략이다. 특히 KTX와 호남고속도로 등 교통

지 플랫폼으로 △수도권·충청권과 연계한 문화 거점 기능 △프로야구 11구단 유치 가능성 △MICE 유치 기반 체류형 관광지 조성 △미륵사

인프라를 활용하면 연간 40만~60만명 유입이 가능하고, 300억원의 소비 유발 효과가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또, 해당 시설들은 유소년 체육과 전지훈련 유치 등으로 지역경제와 도시 브랜드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구체적인 추진 전략으로 △시민 설문조사와 공론화를 통해 여론 수렴 △기본계획 수립과 민간투자 유치 전략 마련 △돛구장과 부대시설 민간 복합화 방식 등으로 순차 추진한다.

이를 위한 입지와 재원은 전문가와 시민 의견을 바탕으로 신중하게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뉴시스